

I. 연구개요

-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8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overarching) 정책 문서인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파트너십 기본정책)’(안)을 공동 작성했다.
- 본 연구는 2019년 1월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작성해 향후 KOICA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KOICA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 작성을 위해 아래의 다섯 가지 내용을 연구범위로 한다.
 - 첫째, 한국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배경과 의의
 - 둘째,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형성과 변화 과정
 - 셋째, 한국 개발CSO 현황 및 정부-개발CSO 파트너십 프로그램 현황 분석
 - 넷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들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과 특성
 - 다섯째, KOICA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 효과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적 접근, 현장중심 접근, 단계적 접근 및 참여적 접근 전략을 활용했으며,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개 심포지엄’, ‘현지조사’ 등 여섯 가지 조사방법을 수립하여 실시했다.

II. 한국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배경과 의의

1. 수립배경

1-1. 국제사회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흐름과 현황

- 국제사회에서는 1950~6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이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개발원조정책에 적용되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파트너십이 본격화됐다(Lewis and Kanji, 2008).
-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2008년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3)’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통해 시민사회를 개발의 독립적 주체이자 중요한 원조행위자로 인정한다.
- 현재 많은 공여국들이 CSO에게 자국의 원조를 지원하는데 OECD DAC 평균은 15%이고 스페인 46%, 아일랜드 38%, 스위스 34%, 미국 24%, 한국 3%이다. 한국 ODA 중 CSO에 대한 지원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정부와는 차별된 국제개발협력에의 기여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OECD DAC공여국들의 다수는 정부와 개발협력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정책/전략문서를 제정하여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로 삼는다.

1-2. 한국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주요 흐름

- 1995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시작됐다.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2018년부터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개최 및 KOICA와 시민사회의 ‘실무협의회’도 신설되어 추진되고 있다.
- 2017년까지 범정부-시민사회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담은 정책문서가 부재했으며, 이에 시민사회는 다양한 계기에 ODA 정책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규모/비율 증대 등을 제안했다(한재광, 2018).

- 2017년 실시된 OECD DAC 동료검토는 “(xii) 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외교부 2018).
- 2018년 OECD DAC이 권고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작성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에게 공동작성을 제안했고, 정부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내부의 협의과정을 통해 2019년 1월 개최된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통과됐다.

2. 내용

-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I.배경, II.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III.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 IV.파트너십 원칙, V.파트너십 이행방안 VI.맺음말 등 총 6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3. 의의

- 지난 1995년 KOICA가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목적, 목표,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정부 정책문서로, 시민사회가 직접 정책을 구성한 주체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 ‘파트너십 기본정책’ 문서는 KOICA 및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향후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준거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Ⅲ.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

1. 목적

- 본 장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및 범위

-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CSO들로 구성된다. 첫째, 설립목적과 주 활동내용이 국제개발협력인 CSO이다. 둘째로는 본 설립목적은 국제개발협력이 아니지만,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CSO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은 주로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현재인 2010년대 까지를 본 연구의 분석범위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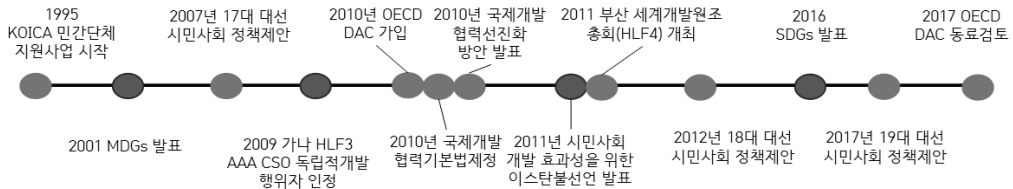
3. 분석 프레임워크

- 본 연구는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분석기준은 ‘조직과 활동’, ‘제도적 환경’ 두개로,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내부적 요소인 ‘조직과 활동’에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양태를 보여주는 ‘특징과 수, 사업분야와 재정규모’가 있다. 외부적 요소인 ‘제도적 환경’의 내용으로는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으로는 ‘법과 제도, 재정협력 프로그램’이 있다.

4. 개발협력 시민사회 형성과 변화 관련 주요 국내외 전환점

-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에는 <그림 1>과 같이 중요한 국내외 행사와 활동들이 전환점(milestone)으로 작용했다.

〈그림 1〉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내의 환경변화



5. 개발협력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 측면의 변화과정

5-1. 특징과 수

- 현재 활동하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이중 역사와 규모, 경험 면에서 중요한 단체들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긴급구호와 재건복구를 위해 활동한 외원단체(FVA)로부터 연계된다.
- 1994년 FVA의 협의체인 KAVA의 해체와 1999년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한국 개발CSO들이 결성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창립은 1990년대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의 한국 시민사회의 전환을 보여준다.
- 1999년 24개 회원단체로 시작한 KCOC의 회원단체는 2019년 144개로 21년 동안 500%의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2000년대는 144개 개발CSO의 40%가 설립되고 국제개발협력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 전통적으로 한국 개발CSO들은 종교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비중이 컸으나 2010년대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해 2017년에는 약 30% 초반대에 이른다. 이는 비종교 기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대를 의미한다.
- 개발CSO의 80% 이상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며, 약 10%대의 단체들은 국제NGO의 한국파트너들이다.

5-2. 사업분야와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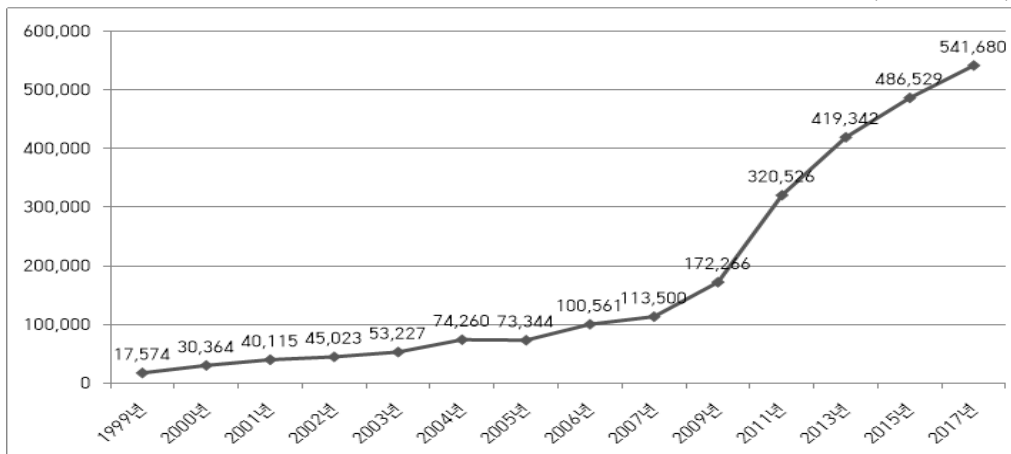
- FVA에서 전환된 단체들은 1990년대 국내사회복지 경험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용했으며,

한국 개발CSO는 1994년 르완다 내전 이후 시작된 긴급구호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남아시아 쓰나미, 이란 지진, 아이티 지진 등을 통해 많은 단체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사업 분야가 다양해졌고 지원규모도 확대됐다. 2017년 한국 개발CSO의 주된 활동 분야 긴급구호, 교육, 의료/보건, 지역개발이다.

- KCOC회원 단체를 포함한 한국 개발CSO들의 사업비는 1999년 약 175억원 규모에서 점차 증대하여 2006년 약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17년 약 5,416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양자간ODA의 약 19.6% 규모에 해당된다. KCOC의 단체수도 1999년 창립 시 24개에서 2019년 144개로 21년간 500% 증대했다.

〈그림 2〉 1999~2017년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비 증대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 KCOC, 2003~2017년 한국국제개발협력CSO편람의 내용을 연구팀이 정리

-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국내외 시민사회 연대체에 활동하며 활동범위와 성격을 확대했다. 2006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가 결성되었고,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출범했다.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2011년 부산개발원조 총회 이후 국제 시민사회 연대체인 CPDE(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에 참여했고, 이후 ‘TAP 네트워크’, ‘Together2030’, ‘아시아발전연대(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KCOC는 개발CSO 협의체들의 국제 협의체인 FORUS의 이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협력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에 정책감시와 애드보커시 활동이 더해졌다. 발전대안 피다와 참여연대 등 정책감시와 애드보커시를 주 활동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했고, GCAP Korea, KoFID, KCOC 등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연대체가 2007년, 2012년, 2017년 대선기간 동안 대정부 정책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했다.
- 1990년대 소수의 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은 2000년대 확대되어 많은 단체가 운영하여 한국의 시민들이 개도국의 시민들과 만나 교류, 협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004년 시작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개발CSO의 현지 사업인력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다.

6. 개발협력 시민사회 제도적 환경 측면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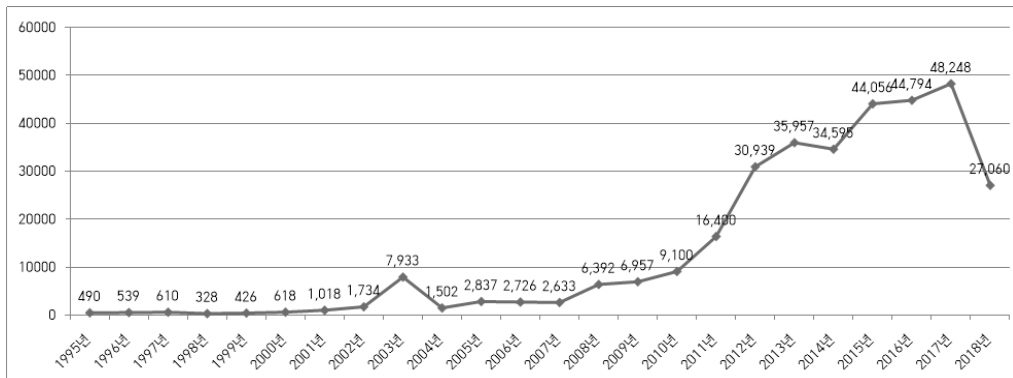
6-1. 법과 정책

-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지향점으로 제시한 ‘세계화’는 이후 ‘ODA중대담화발표’와 연계되었고, 이는 1995년 시작된 KOICA의 시민사회에 대한 ODA지원 프로그램인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배경이 되었다.
- 정부는 200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개선방안,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 2016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 2016년 개발CSO 맞춤형지원방안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파트너십과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문서는 시민사회를 정부의 일방적 지원 대상이자 정책수단으로 규정했다.
- 2017년 OECD DAC의 동료심사 결과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를 제시했고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제정해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설정했다.

6-2. 재정협력 프로그램

- KOICA는 1995년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시작했고, 1995~2019년까지 25년간 약 327,891억원을 1,945개의 사업에 지원했다. KOICA 이외에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등이 개발CSO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1995~2018년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비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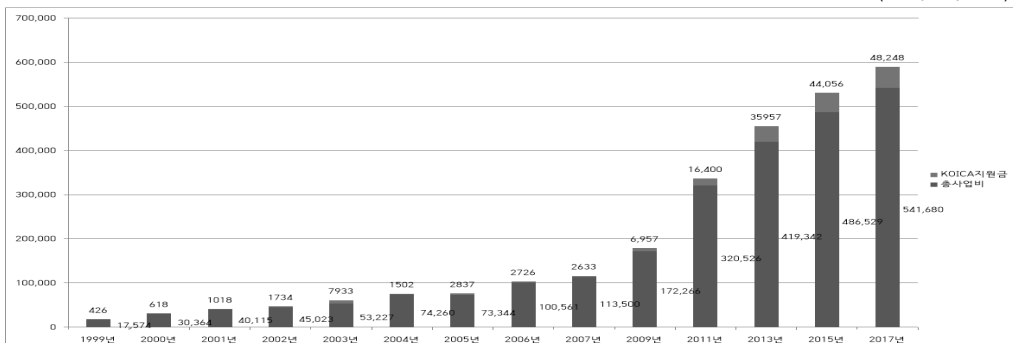


출처: 1995~2018년 KOICA 연보의 내용을 연구팀이 정리

- KOICA가 1995년부터 개발CSO에게 지원하는 ODA자금이 개발CSO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2%에서 최대 14.9%이며, 전반적으로 증대하고는 있으나 10% 미만에 그친다.

〈그림 4〉 1999~2017년 개발CSO의 총사업비 대비 KOICA 지원금

(단위: 백만원)



출처: KCOC, 1999~2017년 개발CSO 편람, KOICA, 1999~2017년 연간보고서 내용 연구팀 재구성

- 2000년대에는 정부기관 외에 민간재단들이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꿈장학재단, 재)바보의 나눔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V. 한국 개발CSO 현황 및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

- 본 장은 크게 3가지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 개발CSO 국제개발협력 활동 현황과 분석이고, 두 번째는 정부대상 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과 분석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과 분석이다.

1. 한국 개발CSO 국제개발협력 활동 현황과 분석

- 본 장은 한국 개발CSO의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개발협력 시민사회 단체 291개이다.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질문은 ① 기관의 조직 및 경영정보, ②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파트너십 현황, ③ 인력구조로 구성되었다. 기관의 조직 및 경영정보의 경우 국제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조사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개발CSO 291개 중 본 조사에 분석 대상 기관은 226개이다(2017 편람 조사결과 144개 포함). 이 중 한국자생단체는 88.9%이고, 국제CSO 파트너 단체는 10.7%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설립연도는 1990년대 이전이 13.7%, 1990년대 20.8%, 2000년대 40.3%, 2010년대 25.2%로 조사되었다. 이 기관들의 해외사업 시작연도는 1990년대 22.2%, 2000년대 41.8%, 2010년대 32.9%로 나타나, 1990년대부터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에 법적 등록을 하였으며, NGO 등록부처로는 외교통상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뒤를 이었다.

- 한국 개발CSO의 종교적 배경으로는 50% 이상의 단체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종교적 신념보다는 인도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개발CSO는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조직 투명성, 사업 책무성, 회계 투명성과 기타 부분에서 자체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했다.
- 한국 개발CSO의 총 수입 규모는 1,910,669백만원인데, 그중 개인(단체)후원이 48.8%, 기업지원이 10.5%, 정부지원이 16.7%로 나타나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개발CSO의 총 지출규모는 1,844,170백만원이다. 이 중 해외 사업이 709,167백만원으로 38.5%, 국내 사업이 709,534백만원으로 38.5%로, 대북사업이 8,627백만원으로 0.5%를 차지한다. 그동안 한국 개발CSO는 해외보다는 국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와 국내의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으며, 2017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개발CSO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 개발CSO(155개)의 국제개발협력 총 사업 현황은 519,542백만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 1,77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몽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이 8개 국가에 한국 개발CSO의 활동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DAC의 목적 코드로 한국 개발CSO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분야를 분류한 결과, 개별 분야로는 지역사회개발이 31.8%, 교육이 11.8%, 보건이 7.0%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 해외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개발CSO는 총 37개로, 51개 국가에서 긴급구호, 재건복구, 재난방지 및 대비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7년 해외 인도적 지원 153개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16,073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 개발CSO 중 현지 CSO와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은 총 28개로, 93개의 사업비 총 5,975백만원을 지원했다(2017년 전체 사업비의 1.2%). 이에 한국

개발CSO는 현지 CSO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한국 개발CSO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 ECOSOC, UN DPI, WFP, UNICEF 등과 협력하고 있었다. 이중 국제기구의 멤버십을 보유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거나, 사업관련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개발CSO의 총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519,542백만원 중 정부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규모는 48,438백만원으로,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규모에 약 9.3%에 해당한다.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제2차 중점협력국 24개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개발 CSO는 23개국에 총 사업비 194,28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자체자금이 약 85%, 정부지원금이 약 15%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 개발CSO는 OECD DAC의 협력국 리스트 (2014~2017) 중 1인당 GNI가 US\$ 1,045이하인 최빈국 (48개국) 중 38개 국가에 총 사업비 185,30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의 약 86.6%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약 13.4%는 정부자금의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한국 개발CSO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10,318명으로, 이중 해외사업 관련 직원은 1,261명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지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9,369명이며, 이중 한국인은 999명으로, 총 근무 인력 대비 약 10.7%를 차지한다. 한국인이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77.3%로, 다수의 기관에서 해외 지부 관리 책임은 한국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 개발CSO 해외지부에 봉사단이 파견된 총 국가 수는 84개이며, 이들 국가에 파견된 봉사단원은 총 4,872명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75.0%, 아프리카가 13.1%로 조사되었다. 2016년과 2017년에 한국 개발CSO에 직원으로 채용된 해외봉사단/ODA인턴 경험자는 총 329명이었다.
- 한국 개발CSO의 3가지 특성 - 기관 설립 유형,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작연도 - 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기관 설립 유형이 국제CSO 파트너 단체,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작연도가

1990년인 경우 수입과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 정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과 분석

- 본 장은 정부 중앙 부처, 청,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이하 정부기관)의 시민사회 협력 정도를 조사하여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시민사회협력의 특징 및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정부기관 대상 기관은 총 57개로 선정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25일 ~ 8월 14일이고, 조사 내용은 2018년도를 기준 정부 기관의 시민사회 협력 방식 및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 57개 중 본 조사에 응답한 정부 기관은 27개이며, 이 중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정부 기관은 11개로 조사되었다.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1개 정부 기관의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방식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지원하거나 의견 청취 혹은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부 정부기관은 한국 개발CSO가 정부 ODA 사업의 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기관은 8개로, 협력사업의 형태는 지정사업 공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 관련 정책, 전략, 혹은 지침 등을 마련하여 파트너십을 이행하는 기관도 있었다. 2016~2018간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규모를 조사한 결과, 협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정부 기관은 2개, 축소되고 있는 정부 기관은 3개, 연도별로 규모가 변동된 기관이 3개로 나타났다.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경우, 정부 기관 4개는 자체 혹은 외부로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을 하는 정부 기관은 7개로 조사되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논의나 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했다.

3. 한국국제협력단 대상 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과 분석

- 본 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부서별 시민사회 협력 정도를 조사하여 KOICA-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KOICA 시민사회협력의 특징 및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 부서는 본부의 총 30개 부서로 선정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4일 ~ 10월 18일이고, 조사 내용은 2018년도를 기준 KOICA의 시민사회 협력 방식 및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부서 30개 중 본 조사에 응답한 부서는 26개이며, 이 중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서는 15개로 조사되었다.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5개 부서의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방식으로 시민사회협력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들이 정부 ODA 사업의 수행자로 시민사회와 협력했다. 일부 부서는 지정사업공모나 자유공모 사업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사업은 1995년부터 시민사회협력실이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시작되었다.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은 2004년부터, 나머지 부서는 2010년대에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간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예산이 외교부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에 증가의 폭은 미미하다.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들이 자체 혹은 외부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사회의 성과를 점검하지만, 그 성과를 확대, 확산하려는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청취/수렴을 하는 부서는 13개로 조사되었다. 의견 청취/수렴 방식은 사안에 따라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방식, 공식적이거나 비정례적인 방식, 비공식적이거나 정례적인 방식, 비공식적이고 비정례적인 방식이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의견 청취/수렴은 주로 간담회, 설명회 등 제도적인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역실의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수렴했다.

4. 시사점

- 한국 개발CSO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활동 역사가 20년 이상 된 기관, 10년~2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관,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활동을 이어온 기관에 따라 기관의 역량, 전문성, 경험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전통적인 파트너십 방식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식에까지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 역사가 오랜 개발CSO의 전문성, 경험 및 역량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반면, 활동역사가 10년 미만인 기관의 경우 조직 및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점이 있다. 이에, 활동 역사가 짧은 개발CSO에 대한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한국 개발CSO의 지원 국가 중 정부의 중점협력국과 중첩되는 국가의 사업비 비중이 총 국제개발협력 사업비의 37.4%이므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개발CSO 파트너십 정책의 조화를 고려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간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개발CSO의 최빈국 지원은 38개국이며, 동 지역에 대한 한국 개발CSO 지원은 총 국제개발협력 사업비의 35.7%이므로 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과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조화를 통해 협력의 시너지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 개발협력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협력은 2010년대 이후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시민사회가 파트너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의견청취나 수렴의 질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20년간의 역사를 통해 도출된 시민사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개발협력 시민사회 모두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개발CSO에서 근무하는 해외사업관련 근무 인력은 국내와 현지를 합하여 약 2,000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단/YP 프로그램은 NGO의 초급 실무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했다. 향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 개발CSO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효과적 역량강화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확대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 개발CSO는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조직 투명성, 사업 책무성, 회계 투명성과 기타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력 시 이러한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V. OECD DAC 공여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프로그램

1.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OECD DAC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비교해 ODA 규모가 더 크고, CSO에 대한 ODA 지원 규모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선진 공여국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10개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EU이다.
 - 분석 국가 중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ODA의 20% 이상을 CSO 협력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3%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정부 공여기관은 외무부 산하의 부처 또는 기관이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는 외무부 산하의 DGIS, 덴마크는 Danida, 독일은 BMZ와 Engagement Global, 벨기에는 외무부 산하의 DGD와 Enable, 스웨덴은 Sida, 스위스는 SDC, 영국은 DFID, 캐나다는 GAC, 프랑스는 CICID와 AFD, EU는 EC 산하의 DG DEVCO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독일,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공여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국가별 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명시하고 있는 정책 문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했으며, 전략 문서 외에도 정부-시민사회 간의 공동성명, 의회 차원에서 발의한 시민사회 협력 방안,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문서 등이 함께 존재했다.
- 분석 대상국의 정부는 각국의 역사성,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신뢰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전략적 파트너십, 시민사회단체 컨소시엄과의 파트너십,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위탁/위임)을 통한 개별 시민사회단체 지원과 시민사회의 전문성에 기반한 다양한 규모별/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정부가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 등을 기반으로 선정한 시민사회단체와 다년간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협의된 지원 예산으로 장기간 동안 유연하고 주체적이며, 효율적인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네덜란드의 Dialogue and Dissent, 덴마크의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스웨덴의 Framework Agreement가 존재한다.
 - 몇몇 국가의 정부는 2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컨소시엄 또는 연합을 형성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평화-개발 벡서스를 위한 Civil Peace Service, 영국의 UK Aid Connect, 스위스의 Programme Contribution, 캐나다의 Canadian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등을 포함한다.
 - 정부가 시민사회협의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시민사회단체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덴마크의 7개 분야의 협의체를 지원하는 Pooled/Delegated Funding과 스웨덴의 Forum Syd 협의체를 통한 Civil Society Programme이 있다.
 - 이 외에도 중소규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 환경 등 특정 주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국가별로 수행되고 있다.
- 국가별 개발협력 시민사회협의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 네덜란드,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개발협력분야에서 대표적인 시민사회협의체 하나가 존재하여 개별 시민사회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한다.
 -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장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주제별로 이루어진 다수의

시민사회협의체가 존재한다.

- 벨기에, 프랑스, EU의 경우 다수의 시민사회협의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협의체를 하나로 묶는 상위개념의 협의체가 존재한다.

- 많은 국가들이 파트너국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CSO 지원 예산 중 평균 10% 이상을 해당 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을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형식에서 시민사회 자체 노력을 아울러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자문,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훈련 및 장학금 지원, 봉사단 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 분석 대상 국가 모두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의 투명성 및 책무성의 제도화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각 국의 맥락에 맞는 시민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유의 프로그램 또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 네덜란드의 DGIS, 영국의 DFID, 벨기에의 DGD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의 IATI 기준 활용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IATI 기준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사회가 IATI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 스위스의 경우 시민사회가 IATI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준인 Aggregated Reference Indicators를 통해 시민사회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 성과 기반 지원 관련, 소수의 국가들이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또는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에 있어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 정부 측은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 협의체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시민사회단체와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2. 시사점

- OECD DAC의 선진공여국 10개국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각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되, 예산의 측면에서 CSO에 대한 ODA 지원 총액과 비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수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장점을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와 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성과에 기반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 여부 및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례협의 등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협의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Ⅵ.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 제안

1. 파트너십 이행원칙

- 공여국들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을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퇴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개발주체로서 상호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시민사회 양 주체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더욱 구체화된 상호보완성 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첫째 : 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화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포괄적 상호보완원칙)
- 둘째 :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집중적 상호보완 원칙)

2. 제언도출을 위한 연구결과의 시사점

- 정부와 국제사회 등 외적 측면의 환경변화와 개발협력 시민사회 내적 노력의 조화로 한국 개발CSO 성장기반이 조성됐다.

〈우호적 환경조성 - 시민사회역량강화〉

- KOICA 및 KCOC가 시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조직, 사업, 인적부문을 포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호적 환경조성 - 전문인력양성〉

- 개발CSO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호적 환경조성 - 시민사회프로그램 다양화〉

- 1995년 이후 한국 개발CSO의 성장을 지원해온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신생 단체나 역량있는 단체들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 ODA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증대해야 한다.

〈우호적환경조성 – 국내외 개발협력주체와의 네트워킹강화 위한 환경조성, 시민사회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취약층 지원〉

-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의 분야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 환경조성 – 시민사회프로그램 다양화〉

-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해 개발CSO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개발CSO 파트너십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 환경조성 – 성과반영한 지원확대〉

-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개발CSO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해 정부 및 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점차 증대한다.

〈정책협의회 정례화, 실무협의회 정례화〉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정책협의 신설 및 실무수준의 협의를 심화해 양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개도국 시민사회 협력〉

- 개도국 현지CSO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도국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여 SDGs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투명성과 책무성〉

- KOICA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발CS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KOIC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

〈인지제고, 국민 참여 강화〉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체계화하고, 인지를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기타〉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정기적 점검 및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기금모델을 구성한다.

3. 이행방안 제안

3-1. 이행방안 요약 및 중점추진 과제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 제안

〈표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 제언 요약

이행방안 항목	정책제언	
	단기(2020~2022)	중기(2023~2025)
1. 우호적 환경 조성	1) 시민사회 역량강화	- 개발CSO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조직, 사업 측면) - 개발사업예산 내 일정비율 (최대 10~15%)의 역량강화 목적포함
	2) 전문인력 양성	- CSO 사업 현지 실무활동가 (CPC, CSO Project Coordinator) 파견제도 신설 - 개발CSO 중견활동가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신설 - 개발CSO 관리자, 대표자, 전문가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신설 - 개발CSO 현직인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3) 국내외 개발협력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위한 환경조성	- 개발CSO 협의체 정책협력사업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추가 - 개발CSO 정책협력사업 신설
	4)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양화	- 개발CSO 자유발굴사업 다양화 - 시민사회협력사업 - 신생 CSO협력사업 - CSO 인큐베이팅사업
		- 개발CSO 자유발굴사업 다양화 - 시민사회전략적협력사업(Framework Agreement) - 시민사회협력사업 - 신생 CSO협력사업 - CSO 인큐베이팅사업
2. 정책수립	5) 정책수립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신설
	6) 정책수립	- 주제별 프로그램 다양화 준비 및 신설 - 인도주의 민간협력지원사업 - 민간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 사회적연대경제 사업 - 신생 주제별 사업준비 및 시행
3. 정책수행	7) 정책수행	-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 (예시) - 인도주의-개발-평화 네트워크 사업 - 기후변화 대응 사업 - 인권에 기반한 접근 사업 - 분쟁 하 취약층 지원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사업 등
	8) 정책수행	-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 - 인도주의-개발-평화 네트워크 사업 - 기후변화 대응 사업 - 인권에 기반한 접근 사업 - 분쟁 하 취약층 지원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사업 등

이행방안 항목	정책제안	
	단기(2020~2022)	중기(2023~2025)
5) 성과·반영한 지원확대	- 개발CSO 사업의 양자간 국별ODA사업과 시범사업 발굴 지원 - 양자간 국별ODA사업 사후관리 개발CSO 참여	개발CSO 사업의 양자간 국별ODA사업과 활성화 지원
	개발CSO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협력 통한 개발 CSO 지원사업 방안 시범 준비	개발CSO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협력 통한 개발CSO 지원사업 시행
	- 시민사회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지표개발 - 개발CSO사업 우수사례 공유 - OECD DAC 평균수준에 근접한 예산목표 설정 및 지원	- 시민사회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지표 활용 - OECD DAC 평균수준에 근접한 예산지원
2. 정책협의회	KOICA 경영진-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 정례 정책협의회 신설	
3. 실무협의회	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실무협의회 심화	
4. 개도국 시민사회협력	SDGs 달성위한 개도국 현지CSO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내에 한국 개발 CSO-개도국 현지CSO 파트너십 제도화
5. 투명성과 책무성	- 개발CSO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현황 및 관련 인지도고, 역량 강화 및 국제적 기준조사 - KOICA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시민사회 협력,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대	개발CSO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국제적 기준의 한국화 방안 단계적 적용
6. 취약층 지원	정부/KOICA 취약국, 취약층 지원전략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강화	
7. 인지도고, 국민참여	- 개발CSO 개발교육 프로그램 신설 - 정부/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합동 국내, 사업지 현장 국제개발협력 캠페인 실행	
8. 기타	정부/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 이행방안 이행 모니터링 /평가 제도화	정부/KOICA-사회복지공동모금회-심성꿈장학재단-제) 바보의나눔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공동파트너십 기금 신설

○ 중점추진 프로그램

중요성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7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중점추진 프로그램

구분 (파트너십 기본정책)		내용
우호적 환경조성	시민사회 역량강화	• 개별 사업예산 내 일정비율(최대 10~15%)의 역량강화 목적 포함
	전문인력 양성	• CSO 사업 현지 실무활동가(CPC, CSO Project Coordinator) 파견제도 신설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양화	• 개발 CSO 자유발굴사업 다양화 •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신설
	성과 반영한 지원확대	• 시민사회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지표 개발
개도국 시민사회협력		• SDGs 달성위한 개도국 현지CSO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
인지제고, 국민참여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 신설

4. 이행구조

4-1. KOICA 내부 이행구조

- 글로벌파트너십 본부 내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프로그램 수행 관련 부서간 업무조정작업을 체계화한다.
- 시민사회협력실이 KOICA 내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 관련 실무총괄부서로 기능한다.

4-2. KOICA -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의 구조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 KOICA 전사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 이행방안 구체안 수립 시 KOICA와 시민사회가 ‘이행방안추진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5. 이행위한 KOICA와 시민사회 역할

〈표 3〉 KOICA/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 구체적 실행시기 및 역할분담

이행방안 항목		정책제안				
이행방안 항목		단기(2020~2022)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중기(2023~2025)과제	실행시기
1) 시민사회 역량강화		• 개발CSO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조직, 사업측면)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자금 지원, 시민사회실행		
		• 개별사업예산 내 일정 비율 (최대 10~15%)의 역량강화 목적포함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협력실)실행		
2) 전문인력 양성	1. 우호적 환경 조성	• CSO 사업 현지 실무활동가(CPC, CSO Project Coordinator) 파견제도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글로벌 인재총괄운영실)실행		
		• 개발CSO 중견활동가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 연수프로그램 내 개발CSO 현안 관련 직원 국내 및 3국 초청 사업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4 실행
		• 개발CSO 관리자, 대표자, 전문가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자금 지원, 시민사회실행		
		• 개발CSO 현직인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연수사업실) 실행

정책제안							
이행방안 항목	단기(2020~2022)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중기(2023~2025)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3) 국내외 개발협력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위한 환경조성	• 개별CSO 협의체 정책 협력사업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추가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 KOICA 연수프로그램 내 SDGs 16, 인도주의-개발-평화 박서스 및 기타 정책연수 프로그램 신설 - 개발CSO활동가 참여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4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연수사업실) 실행
		• 개별 개발CSO 정책 협력사업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4)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양화	• 개별 CSO 자유발굴 사업 다양화 - 시민사회협력사업 - 신생 CSO협력사업 - CSO 인큐베이팅사업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 개발 CSO 자유발굴사업 다양화 • 시민사회전략적협력사업(Framework Agreement) - 시민사회협력사업 - 신생 CSO협력사업 - CSO 인큐베이팅사업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4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사업기획전력실) 실행			
• 주제별 프로그램 다양화 준비 및 신설 - 인도주의 민간협력 지원사업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 (예시) - 인도주의-개발-평화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4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	

정책제안						
이행방안 항목	단기(2020~2022)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중기(2023~2025)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 민간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 사회적연대경제 사업 - 신설 주제별 사업준비 및 시행			화 넥서스 사업 - 기후변화 대응 사업 - 인권에 기반한 접근 사업 - 분쟁 하 취약층 지원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사업 - 기타		(시민사회협력실, 다자협력인도실,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기타부서) 실행
	• 개발CSO 사업의 양자간 국별ODA사업화 시범사업 발굴 지원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사업기획전략실, 현지사무소) 실행	• 개발CSO 사업의 양자간 국별ODA사업화 활성화 지원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이후 지속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사업기획전략실, 현지사무소) 실행
	• 양자간 국별ODA사업 사후관리 개발CSO 참여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사업기획전략실, 현지사무소)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자금지원, 시민사회 실행
	• 개발CSO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협력 통한 개발CSO 지원사업 방안 시행 준비	• 2020 실행방안 마련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 개발CSO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FO)협력 통한 개발CSO 지원사업 시행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3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자금지원, 시민사회 실행

정책제안						
이행방안 항목	단기(2020~2022)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중기(2023~2025)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5) 성과 반영한 지원확대	• 시민사회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지표개발	• 2020 방안마련 및 개발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 시민사회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지표 활용 • OECD DAC 평균수준에 근접한 예산지원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이후 지속실행	• KOICA, 시민사회 공동 실행
	• 개발CSO사업 우수 사례 공유	• 2020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 OECD DAC 평균수준에 근접한 예산목표 설정 및 지원	• 2020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KOICA/법정부 협의			
	• KOICA 경영진-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 정례 정책협의회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실행			
2. 정책협의회						
3. 실무협의회	• 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실무협의회 심화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실행			
4. 개도국 시민사회협력	• SDGs 달성위한 개도국 현지CSO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현지사무소) 실행	•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내에 한국 개발CSO-개도국 현지CSO 파트너십 제도화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3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실행
	• 개발CSO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현황조사, 인지도고, 역량강화 및 국제적 기준조사	• 2020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 개발CSO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국제적 기준의 한국화 방안 단계적 적용	• 2023 실행방안 마련 • 2024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후 KOICA

정책제안						
이행방안 항목	단기(2020~2022)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중기(2023~2025)과제	실행시기	실행역할분담
	• KOICA 투명성, 책무성 제고위한 시민사회 협력, 시민참여 프로그램 증대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시민사회 협력) 실행
6. 취약층 지원	• 정부/KOICA 취약국, 취약층 지원전략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강화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2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 다자협력인도실) 실행			
7. 인지도제고, 국민참여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 신설	• 2020 실행방안 마련 • 2021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후 KOICA(시민사회협력실/ODA 교육원)실행			
	• 정부/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합동 국내, 사업장 현장 국제개발협력 캠페인 실행	• 2020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			
8. 기타	• 정부/KOICA-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 이행방안 모니터링 / 평가 제도화	• 2020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 기획 및 실행	• 정부/KOICA-사회복지공동모금회-삼성공공재단(재)비보의나눔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공동파트너십 기금 신설	• 2022년 실행방안마련 • 2024년 실행	• KOICA/시민사회 '이행방안 TF' 공동기획 및 시민사회 주도실행